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해외환경규제동향

2007

01

VOL.29

'해외환경규제동향'은 환경부와 전경련이 함께 운영하는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TEN)'의 월간 뉴스레터입니다



미국판 RoHS 법규 제정 추진될 듯

- AeA, 미 의회 장악한 민주당 연방차원 유사법규 입법 전망 -



미국 전자산업협회(AeA, American Electronics Association)가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2007년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연방차원에서의 미국판 RoHS 법규 제정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AeA는 협회가 발행하는 월간 뉴스레터 특별판을 통해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게 된 110회 의회 회기 동안 입법추진 방향과 이에 따른 전자산업의 영향을 전망한 리포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캘리포니아 출신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취임과 함께 시작된 이번 의회 회기에서 민주당은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입법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AeA는 이 리포트를 통해 ▲ 기후변화, ▲ 에너지효율, ▲ 전자제품 재활용 이슈를 포함한 3가지 환경정책분야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를 필두로 미국 주정부차원에서 확산되고 있는 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제한 및 재활용관련

연방법률 입법을 금번 의회에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EU의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제한지침(RoHS)의 캘리포니아판으로 불리는 '폐전자제품재활용법(Electronic Waste Recycling Act)' 제정을 추진했던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인 힐다 솔리스 의원이 '에너지 및 통상위원회'의 환경 및 유해물질 분과장에 지명된 사실은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 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특정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대상 전자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게 된다.

현재 미네소타, 메인, 메릴랜드, 뉴저지, 테네시, 버몬트, 워싱턴 및 위스콘신을 포함 8개 주정부가 유사법률을 이미 제정했고, 그 외에도 여러 주정부가 관련 법률 도입을 고려하고 있어 향후 몇 년간 그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자제품으로 인한 환경문제 대응 필요성 인식이 주정부 차원에서 확산되고 있고, 이는 연방차원의 관련 법률 도입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판 RoHS 제정 추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제 핵심관심 사항은 법률안의 규제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관련 법률 즉, 캘리포니아 또는 EU의 법규를 그대로 채용할 것인지, 아니면 좀더 강화된 형태가 될 것인지 등이 관심의 초점이 될 것이다.

출처 | 미국 전자산업협회(AeA), ELFNET

CONTENTS

헤드라인

1

미국판 RoHS 법규 제정 추진될 듯

신년사

2

이규용 환경부 차관

해외동향

3

- EU 의장국 독일, 에너지 정책 중점 추진
- 영국, 자동차 등의 몸체용 구조재 친환경 플라스틱 개발 착수
- 미국 친환경 컴퓨터 정보제공 시스템 EPEAT 등록 제품 빠른 증가 추세
- UNEP, 국제적 수은사용 제한조치 고려
- 유통체인 월마트, 고효율 형광램프 보급 촉진 캠페인
- EU 집행위, EMAS 및 EU 에코라벨 개정 의견수렴 실시

Trade & Environment Outlook 2007

7

2007년 EU 환경규제 이슈 및 전망,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전문가 리포트

9

- EU 환경규제 현황과 기업의 대응 자세
- 화학물질관련 국제 규제 동향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종 정책동향

주요단신

15

- 노르웨이,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엄격 규제
- 영국, 민간대상 기후변화 대응 촉진 노력
-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에서도 RoHS 규제 적용

관련 국제회의 정보

16



국제환경규제 능동적 대응 길라잡이 역할 기대



이규웅 환경부 차관

2007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300년 만에 최고기온을 기록한 알프스 스키장은 눈이 없어 폐장하는 반면, 한여름철인 남반구의 호주에서는 때이난 눈으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스텐(Stem)의 '기후변화의 경제학' 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현상을 방지할 경우 그 피해비용은 매년 세계 GDP의 5~20% 수준일 것이라 합니다. 이에 최근 EU, 일본,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입법화하는 등 각국의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대처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EU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환경정책이 강화되면서 각종 제품에 대한 환경규제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EU는 전기전자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규제(RoHS)를 시행하였고, 올해 6월에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환경규제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에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의존도가 70%를 넘는 우리나라로서는 높아져 가고 있는 국제환경규제 움직임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친화기업과의 온실가스 자발적 협약 체결, 한미 FTA 환경협상 추진 등 새로운 국제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법률' 제정 추진, 'REACH 기획단' 발족 등을 통해 국내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보완·변경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최신 해외환경규제 정보를 기업들에게 적시에 제공하고자 전경

련과 공동으로 '무역·환경정보 네트워크(TEN, www.ten-info.com)'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해외환경규제 정보를 보다 다양화하고, 기업들의 수요(needs)에 맞게 무역·환경정보 네트워크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우선, 정보대상을 종래 제품 환경규제 위주에서 기후변화, 무역환경협상, 해외 환경시장 여건 등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외정보 자체 수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정보 전달형 시스템을 문제 해결형 시스템으로 개편하고, 보다 많은 기업이 정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외환경규제 동향에 대한 지방 설명회 개최 및 월간 '해외환경규제동향' 보급 대상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경련 등 산업계와 협력적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해외환경규제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환경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산업계의 실천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급변하는 국제환경규제 질서 속에 '해외환경규제동향' 이 많은 기업인들에게 유용한 길라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올 한해 기업인 여러분들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U 의장국 독일, 에너지 정책 중점 추진



올해부터 새로이 EU 의장국을 맡게 된 독일이 의장국 수임 기간(2007. 1. 1 ~ 6.30) 동안 중점 추진할 주요 계획을 지난 12월 19일 발표했다. 환경분야 중점 추진 시책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이슈를 선정한 독일은 야심찬 에너지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EU 집행위원회는 1월 10일, 이러한 EU의 야심찬 에너지정책 추진을 위한 일련의 정책안을 발표했다. 독일은 오는 3월 8~9일 개최되는 각료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사회 의결 이전에 에너지 및 환경 각료이사회가 각각 2월 15일과 20일에 회합을 열어 집행위 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새로이 EU 의장국을 맡게 된 독일이 의장국

또한 2월에는 환경 각료이사회가 항공분야의 이산화탄소 배출권거래제도 (ETS, Emission Trading System) 적용여부를 포함해,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방안 등을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며, 6월말 개최 예정인 제2차 회합에서 항공 분야 ETS 포함여부, 자동차 연료품질 개정 등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추진한다.

이렇게 올해 상반기에는 향후 EU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실행조치 마련 활동이 활발히 펼쳐질 전망이다.

* 올해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2개국 이 가입함에 따라 총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의 의장국은 각 회원국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6개월씩 수임한다.

출처 | EU 의장국 공식 홈페이지, EU 집행위



영국, 자동차 등의 몸체용 구조재 친환경 플라스틱 개발 착수



무역산업부(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는 약 78만 파운드(약 14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자동차 문(door) 및 보트 몸체에 적합한 경량의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 개발 연구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 사업은 영국의 선진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업체인 NetComposites가 주관해 수행할 예정이다.

그간 자동차의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친환경 엔진 개발에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왔으나, 이제는 자동차, 보트에 응용 가능한 친환경소재 개발에 주력할 시점이라는 것이 DTI의 판단이다. 프로젝트 착수를 발표하면서 DTI 측은 “일

영국이 구조재 (structural materials)용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에 착수했다. 영국

반 플라스틱의 경우 그 분해에 몇 천년이나 소요된다. 이번 친환경소재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자동차 차체 등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한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DTI 측은 특히 구조재료 적용할 목적의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은 최초의 시도라고 덧붙였다. 즉, 구조재용으로까지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응용분야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수요는 계속 증가 추세다. 모든 제품 분야에 걸쳐 사용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포장부문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유럽의 많은 체인점들이 화석연료 고갈과 기후변화를 우려하는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에 부응해 생분해성 포장재를 도입하고 있다. 더 나아가 최근 마즈다와 같은 자동차 메이커들은 자동차 내부 부품용 고강도/고내열성 바이오 플라스틱을 개발하는 등 응용분야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출처 | 영국 DTI, NetComposites



미국 친환경 컴퓨터 정보제공 시스템 EPEAT 등록 제품 빠른 증가 추세

미국 환경청(EPA) 지원 프로젝트로 개발·운영되고 있는 친환경 컴퓨터 정보제공 시스템인 EPEAT (Electronic Product Environmental Assessment Tool) 등록 친환경 컴퓨터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7월, 69개 제품에서 올 1월 현재 등록 제품이 9개 기업 320여 제품으로 6개월 간 무려 4배 이상 시스템에 등록된 친환경 컴퓨터가 증가한 것이다.

EPEAT는 정부 등 대량 구매자를 대상으로 설정된 환경기준에 기초해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및 모니터를 포함한 컴퓨터 제품의 환경성을 평가하고 이를 등급화해 구매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제품 구입시 제품 환경성을 고려한 구매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달지원 시스템이다.

EPEAT 총괄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GEC (Green Electronics Council) 측은 작년 말 그동안의 시스템 운영성과를 발표하면서 “이제 많은 기관들이 친환경 컴퓨터 공급을 요구하고 있고, 향후 계속해서 EPEAT 등록 제품 및 참여 기업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시스템 등록 제품은 기존 제품에 비해 납, 카드뮴, 수은 등 유해물질을 저감 또는 제거하고, 에너지 효율 및 재활용성을 향상시킨 제품으로, EPA는 향후 5년 동안 이들 친환경 컴퓨터 구매를 통해 최소한 천3백만 파운드의 유해폐기물을 저감하고, 60만 MWh에 달하는 에너지(6백만 가구에 공급되는 전력량) 절감 효과 발생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PEAT 등록 제품의 빠른 증가추세는 녹색조달 촉진을 위한 연방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에 의한 영향이 크다. EPEAT는 연방기관의 친환경 전자제품 구입, 사용과정에서의 환경영향 저감 및 친환경적 폐기 촉진을 위한 자발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인 ‘Federal Electronics Challenge (FEC)’의 친환경조달 이행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고 있다. FEC는 참여 기관에 대해 2008년까지 구매 컴퓨터의 95% 이상을 EPEAT bronze 등급 이상인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 2004년 백악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친환경 전자제품 조달과 사용 및 폐기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환경청, 국방부, 에너지부 등 11개 행정부처와 그 산하기관을 포함해 총 134개 연방기관이 FEC 프로그램에 참여해 컴퓨터 구입시 EPEAT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이와같이 연방 프로그램에서 친환경 전자제

품 조달 촉진을 위한 이행수단의 하나로 활용됨에 따라 EPEAT 등록 컴퓨터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특히 매주 1만대 정도의 폐 컴퓨터를 양산하고, 연간 약 600억 달러 규모의 전자제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구매력을 감안한다면 미국 공공부문 친환경 컴퓨터 시장 진출에 있어서 EPEAT 시스템 활용도는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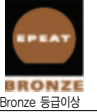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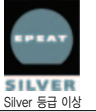

관련해서 미국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는 제품 구매절차에 EPEAT 친환경 컴퓨터 기준을 반영한 녹색구매 실행노력을 인정받아 연방 환경 파트너십 프로그램 추진에 현격한 공로가 있는 기관 및 공무원을 시상하는 ‘White House Closing the Circle (CTC) Awards’를 지난 2006년 수상했다. CTC Awards를 수상한 보훈부 측은 제품 구매 절차에 EPEAT를 손쉽게 반영할 수 있었다면서, 구매자의 녹색조달 수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평가했다.

* EPEAT : 자발적인 컴퓨터 환경성 평가 표준(IEEE 1680-2006: Environmental Assessment of Personal Computer Products)과 이 표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식별하고 검증하는 시스템,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23개 필수기준과 28개 선택기준으로 구성된 IEEE 1680 표준에 따라 bronze, silver 및 gold 3개 등급으로 친환경제품이 분류된다. 필수기준만을 만족하는 제품은 bronze 등급, 선택기준을 50%, 75% 이상 만족하는 제품은 각각 silver, gold 등급이 부여된다. 자발적 등록 시스템인 EPEAT에의 등록은 기업이 IEEE 1680 표준에 자제품이 적합한지 자체검사를 수행하고, 등록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괄 운영기관인 GEC의 동의서에 사인하고 수수료 지불 후 해당 시스템에 제품을 등록하게 된다. GEC는 해당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매년 등록된 제품의 일부를 선별해 IEEE 표준 적합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출처 | 미국 EPA, GEC, EPEAT

[표] EPEAT 친환경 컴퓨터 분류등급 및 등록제품 수

등록 제품 수 (개)	 BRONZE Bronze 등급 이상	 SILVER Silver 등급 이상	 GOLD
데스크탑 컴퓨터	69	67	0
통합시스템	6	6	0
모니터	75	68	0
노트북	169	155	0



UNEP, 국제적 수은사용 제한조치 고려



유엔 환경 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이 지구적 차원에서의 수은 사용 및 배출저

감을 위한 규제조치 도입을 고려한다. 오는 2월 5일부터 9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되는 제24차 UNEP 집행이사회 회의에서는 중금속 이슈가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국내 수출산업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전기전자산업과 관련해 납, 수은 및 카드뮴의 배출과 사용 감축을 위한 구속력 있는 구제적 협약 추진을 요구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이 이미 배터리 등 일부 제품에 대해 수은 등의 화학물질 사용을 지구적 차원에서 규제할 필요성을 주장하며 관련한 새로운 국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

UNEP은 수은규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난 2001년 워킹그룹을 만들어 수은에 대한 국제적 평가작업을 수행하고, 2003년 집행이사회는 모든 국가에 대해 인간 건강과 환경에 위해영향을 줄 수 있는 수은 저감을 위한 국가 행동계획 채택 요구를 의결한 바 있다. 그리고 2005년 제23차 집행이사회 회의에서 EU 및 일부 국가들이 수은 저감을 위한 국제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의 진행을 요구했다. 반면 미국은 수은의 주요 배출원인 5개 분야에서의 자발적 파트너십을 통한 수은 저감방안을 제안했다. 당시 집행이사회는 국제협약에 대한 협의의 진행여부에 대한 의결을 연기하고, 2007년 회의 즉, 올해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수은저감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개최되는 24차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수은 저감을 위한 지구적 행동조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EU가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추진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협약 초안을 마련해 다른 국가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2020년까지 국제 수은사용 및 수은배출을 2000년 대비 각각 75%, 50% 감축을 목표로 특히, 공정 및 제품 내 수은대체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자발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한 수은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수은저감을 위한 준수의무를 부여하는 국제협약 추진에 반대하고 있고, 기타 여러 나라가 이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장 구속력 있는 규제도입이 의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의무준수를 요구하지 않고 수은저감 목표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타협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추진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제적 또는 국가별 저감 목표설정을 포함해, 수은사용 또는 수은배출 저감을 목표로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목표 수준, 감축목표 기준년도 설정 등이 주요 쟁점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은으로 인한 인체 건강 및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국제 환경



협약 추진을 주장하는 EU는 세계 최대 수은 수출국으로써, 2011년부터 수은수출을 금지하고, 수은함유 측정기기에 대한 시장판매를 금지하는 관련 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출처 | UNEP, EIATRack, ENN



유통체인 월마트, 고효율 형광램프 보급 촉진 캠페인

세계 최대의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금년 한해 동안 자사 매장에서 1억 개의 컴팩트형 형광램프(CFLs, compact fluorescent light bulbs) 판매를 목표로 친환경제품 보급·촉진 캠페인을 시작했다. 고효율 CFLs 판매촉진을 위해 월마트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CFLs 사용에 따른 에너지 절감 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Calculator' 기능을 제공하고, 매장

에서 고객이 직접 제품 품질을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있도록 전시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판매 직원대상 판매 촉진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CFLs는 백열전구보다 최소 8~12배 정도 제품 수명이 길고, 발열량이 낮은 고효율 램프이다. 형광램프보다는 백열전구를 사용한 간접조명 사용이 일반적인 미국 가정에서 고효



을 CFLs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에너지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그리고 제품수명이 짧은 백열전구 대체를 통해 폐기물

량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고 월마트 측은 밝혔다. 한 가구 당 평균 보유 전구 소켓을 30개로 가정할 때 약 1,000달러의 전기로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2006년 말 환경경영을 자사 핵심사업으로 표방한 월마트는 그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고효율 램프의 판매촉진 캠페인도 이러한 경영방침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월마트는 향후 모든 운송수단의 에너지 효율 25% 개선, 전체 매장 운영에 사용되는 에너지 30% 절감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자사매장 운영관리 부문 에너지효율 개선 노력도 펼치고 있다.

월마트 Andy Ruben 부사장은 “적절한 가격에 친환경 제품을 공급하는 것은 중요하다. 유통체인 월마트는 앞으로도 친환경 제품 공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계에 걸쳐 2,700여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월마트의 적극적인 환경경영 및 판매전략은 제조회사의 친환경제품 생산을 증대시키고, 소비자들에게 친환경소비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친환경제품 보급에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월마트, Greenbiz.com

출처 | 월마트, Greenbiz.com



EU 집행위, EMAS 및 EU 에코라벨 개정 의견수렴 실시

EU 환경경영 인증 및 EU 에코라벨 제도 개정작업을 진행 중인 EU 집행위원회가 개정안을 정식 제안하기 전에 온라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2년 전부터 두 제도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한 집행위는 제도 평가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외부 연구(EVER, Evaluation of EMAS and Eco-label for their Revision)를 진행했고, 작년 그 결과보고서가 발표됐다. 이 보고서는 두 제도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국제 환경경영 시스템 인증(ISO 14001)과 비교되는 유럽의 환경경영 및 환경감사 시스템(EMAS, 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참여 기업 및 기관의 환경성과를 현저히 개선하고자 하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나, 보급·확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MAS가 환경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ISO 14001에 비해 시장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다(유럽 내 인증기업 및 기관이 EMAS 5,000개, ISO14001 35,000개 임). 보고서는 그 원인으로 지나친 관료적 절차, 참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또한, EU 에코라벨(EU Flower)제도에 대해 제품 환경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고, 각 회원국별 에코라벨 제도에 비해 그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낮은 인지도와 적은 상품목 수, 인증취득 경비 등이 제도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U의 대표적인 자발적 인증제도인 EMAS와 EU Flower의 시장에서의 이용 확대를 위한 기본 발전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집행위는 이 보고서가 제시한 개선방안과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규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MAS와 EU Flower에 대한 온라인 의견수렴은 각각 2월 29일과 3월 2일까지 진행된다.

출처 | EU 집행위, Percha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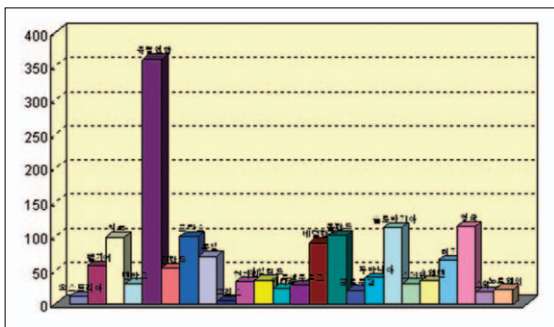
➔ 2007년 EU 환경규제 이슈 및 전망,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구주산업환경협의회 박 대 영 사무국장

2007년 1월 1일부터 유럽연합(EU)은 27개 회원국, 22개의 공용어, 약 5억의 인구를 가진 시장이 되었습니다. 단일 시장의 확대로 시장 진출 폭이 넓어졌지만, 그만큼 위험관리의 폭이 넓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EU 규모 확대와 더불어 내부적으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역시 관심을 끄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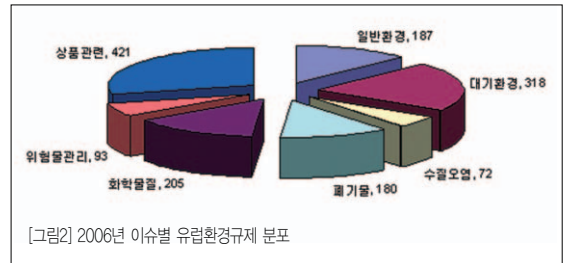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EHSMONITOR에 의하면 EU 및 회원국과 주요 유럽국가에서 환경 및 환경보건정책 및 규제와 관련해 총 보고된 건수는 1,553건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매일 최소 200건 가량의 환경정책 및 규제관련 문건이 유럽 각국에서 논의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1]을 분석해 보면, 2004년 5월 1일 EU에 가입한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의 신 회원국들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환경관련 정책 및 규제를 이행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과, 올해 EU에 가입한 루마니아의 경우, 회원국 가입협약에 부응하기 위해 작년 한해 동안 꾸준히 관련 입법작업을 추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책 및 법률이 만들어 졌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에 있어서는 시한이 소요되므로 동유럽국가에서 바로 서유럽 선진국가와 같은 법 집행력을 기대할 수는 없으나, EU 집행위원회에 의해 그 집행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받게 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환경정책 및 규제를 적정하게 집행하게 될 것 입니다.



[그림1] 2006년 유럽 국가별 환경규제동향

기후변화

특정 환경 이슈별로 분석해 보면, 대기, 화학물질, 상품관련 환경정책 및 규제가 가장 빈번하게 주요 이슈로 논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EU의 의지를 보여 주듯이, 기후변화관련 정책 및 규제가 그 주요 안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의 경우는 EU 각 회원국들이 각국별 배출권 할당계획(National Allocation Plan)을 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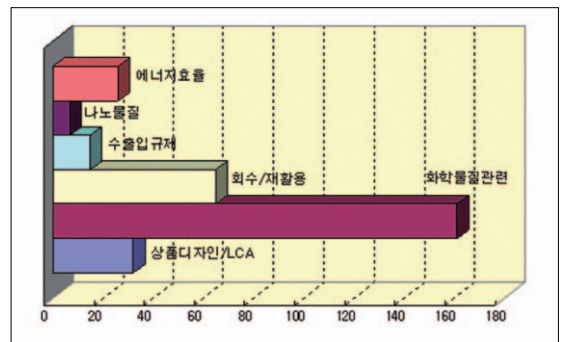


집행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 관련 안건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미 국내에도 알려진 바와 같이, EU 집행위원회에서 각 회원국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 관련조치와 더불어, 2007년은 에너지이용 상품의 에코디자인 지침(EuP Directive)의 이행조치(Implementing Measures) 및 건물 에너지효율 등에 대한 논의가 좀 더 본격화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상품관련규제

한국기업에게 가장 큰 도전으로 다가오는 상품관련 규제는 [그림2]에서 보듯이 EU의 환경규제 논의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림3]에서 나타나듯이, 상품관련 화학물질 규제(ELV Directive), 전자제품재활용지침(WEEE Directive) 등으로 인한 폐기물회수 및 재활용 또한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품디자인 및 에너지효율 또한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고, 이는 화학물질규제 및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06년 중, 상품관련 논의에 있어 가장 흥미 있는 이슈는, 나노기술에 대한 환경관련 정책 및 규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전자제품 및 전기기기 분야에 있어 나노기술 적용은 이미 실용화가 상당히 진척된 분야이기도



[그림3] 2006년 상품관련 유럽환경 규제동향

합니다. 나노기술과 이를 이용한 생명공학기술 등은 유럽에서 꾸준히 그 논의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화학물질규제

마지막으로 환경규제의 중심 항목인 화학물질관련 규제입니다. 2007년은 이미 국내에서도 많은 대응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소위 유럽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가 그 이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REACH의 경우, '규칙 (Regulation)'으로 채택되어 EU 회원국 국내법으로의 이행절차 없이 문건 그대로 적용되나 REACH 자체가 기존의 관련 화학물질 규제지침(예, Directive 91/155/EEC, Directive 93/105/EC, Directive 2000/21/EC, Directive 93/67/EEC, Directive 76/769/EEC) 및 규칙 (예, Regulation EEC/793/93, Regulation EC/1488/94)들을 대체함으로써 기존 규제들과의 관계를 명확화하는 작업이 EU 및 회원국 내에서 2007년부터 한층 더 본격화 될 것입니다. REACH의 채택 및 이행과 더불어, 화학물질의 분류 및 위험물표지와 관련된 세계조화시스템(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에 관한 규칙 또한 2007년에는 그 세부적 입법이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REACH는 적용범위 및 전문성 요구의 광범위함으로 인해, 어느 한 기관이 대응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법률, IT시스템, 정보관리, 공급

망, 화학공학, 기업협업체, 정부부처 등 각 전문그룹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대응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위험(Risk)'은 그 어떤 분야를 불구하고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항들 또한 광범위한 위험요소들 중의 몇 가지 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시 위험관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구가 있다면, "측정 불가능한 위험은 관리가 불가능하다 (Not Measurable, Not Manageable)"라는 어구가 아닌가 합니다. 위험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표1]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법률 의무 사항들의 예를 몇 가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유럽 및 세계시장에서 거의 매 시간별로 나타나는 새로운 위험요소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측정하고 계십니까?

일례로서, 제너럴일렉트릭사(GE)의 Ecomagination이라는 환경경영 및 전략 모토를 분석한 환경경영 및 환경전략에 대한 많은 정보와 자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도구를 이용하여 GE가 Ecomagination이라는 모토와 관련 투자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한 자료는 찾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126년의 역사와 함께 GE는 87개의 토양오염시설도 함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환경위험관리에 대한 노후와 도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GE의 전세계 환경관리자들은 보고된 전세계 규제동향을 분석하고, 각 시설별 감사 실시, 관리자 및 근로자 교육·평가 등의 도구를 통해, 각 국가별, 시설별 위험도 측정 및 이에 따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도구들과 경험이 Ecomagination이라는 전략모토를 만들어 내고, 환경비용을 환경전략이라는 개념으로 전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내에도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TEN), 국제환경규제대응 표준화 기반구축사업(N-CER), 무역상 환경장벽 정보시스템(EBT) 등의 정보채널, 정부기관 및 기업협업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관련 국제환경규제대응 프로젝트 등을 통하여 많은 정보공유 및 의사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국내 및 해외에 있는 시설운영 및 상품수출에 대한 마지막 책임은 개별 사업체에 있다는 것도 주지되는 바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각 사업체에 적용되는 중요정보를 파악하고, 대응하고, 시장을 선도해 나아가는 건 조직 관리자의 몫입니다.

구주산업환경협의회(KECE) 활동 및 활용

2006년 9월 벨기에 브뤼셀에 설립된 구주산업환경협의회(www.kece.eu)는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인 유럽환경규제대응을 통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설립된 민간기업협의체입니다(독립성 유지 및 회원사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현재

[표1] 2007년 유럽환경규제 준수 요구사항

시한	주요요구사항 및 근거법률	국가
2007년 1월1일	(예외적용을 받지 아니한 경우) 지구온난화지수 150을 초과한 불소화합물기체를 함유한 공기조절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은 형식승인이 거부됨. (Directive 2006/40/EC)	EU
	유럽 PRTR시스템에 데이터 제출의무부여 범위가 확대됨. (Regulation EC/166/2006)	EU
	음식물포장용 예복시 사용 재료 등은 Regulation EC/1895/2005의 요구사항의 준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EU
	자동차 제조자는 2002년 7월 1일 이전에 출시한 차량회수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부담함. (Commission Decision 2005/293/EC, Commission Decision 2005/438/EC, Commission Decision 2002/525/EC, Commission Decision 2002/151/EC, Directive 2000/53/EC)	EU
	페인트, 도로 및 차량용 표면마감재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Directive 2004/42/EC)	EU
	페인트, 도로 및 차량용 표면마감재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Vyhlaska c. 509/2005)	체코
	냉장기기 등에 사용되는 오존층파괴물질의 경우, 특정요구사항에 맞게 처리되어야 함. (Abfallbehandlungspflichtenverordnung)	오스트리아
	실외용 소음배출기기에 대해 레이블링 및 CR마크요구사항이 적용됨. (V. 19.) Korm)	헝가리
	호흡성 PVC분진에 대한 법적 노출기준이 적용됨. (Staatscourant 3 maart 2005, nr. 44).	네덜란드
	전기전자제품을 출시하는 기업의 경우, 매분기 15일까지 출시량을 환경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Dz. U. 2006, Nr 6, poz. 37, Dz. U. 2006, Nr 6, poz. 40)	폴란드
시멘트상품 등에 6가 크롬사용이 제한됨. (Chemikalien-Risikoreduktions-Verordnung (ChemRRV) vom 18. Mai 2005 (SR 814.81))	스위스	
M1형 자동차의 경우, 2004/3/EEC의 규정에 부합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함. (RG 26271 tarih 26 A?ustos 2006)	터키	
페타이어의 처리, 재활용, 수집, 저장 및 운송에 대한 의무사항이 부여됨. (RG 26357 tarih 25 Kas im 2006)	터키	

<15면>에 계속



EU 환경규제 현황과 기업의 대응 자세 - 국내외 전자업계 움직임을 중심으로 -

LG 전자 | 최 광 림 책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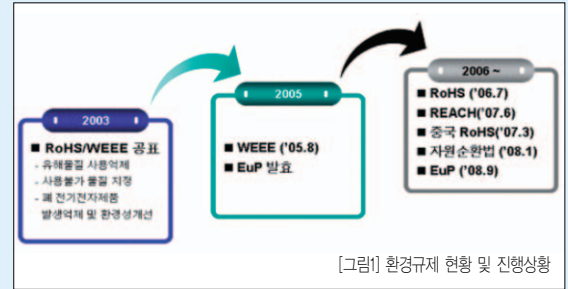


지금까지 환경문제는 범 지구적 차원에서 환경오염 방지 위주로 UN과 같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EU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자국 환경보호의 중요성 인식하에 이에 상응한 환경보호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특히 국가 간의 제품, 무역 거래 시 자국의 환경보호와 연계하여 장벽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선진 국가를 중심으로 한 제품 환경규제는 국가별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EU를 중심으로 폐가전처리 지침(WEEE 지침),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에너지사용제품의 에코디자인지침(EuP 지침) 등의 환경규제가 이미 발효되었거나 일부는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규제가 발효되고 있는 국가에 전기전자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국내의 기업들은 무역 차질 등의 산업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며, 국내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친환경적 의식 전환 및 비용투자에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최근의 선진 환경규제 현황과 이에 대한 국내의 업계의 대응방향을 살펴보고 기업이 환경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앞으로 갖추어야 할 자세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시사하고자 한다.

선진 환경규제 동향

지금까지의 전세계적인 환경규제 패러다임을 살펴보면 정책 입안이 1980년대에는 end of pipe 개념의 사후 관리 측면에서 공장, 공정 중심의 환경오염 방지에 중점을 두었다면 1990년대를 거쳐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사전 관리 측면에서 제품의 전과정을 고려한 청정생산뿐만 아니라, 기업,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관리 개념과 의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는 제품의 설계, 생산, 유통, 소비자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의무와 책임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제품의 친환경적 설계, 환경적합성 평가를 통한 판매규제,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 제한, 제품의 수거와 재활용체계 구축 등 제품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EU의 통합제품정책(IPP, Integrated Products Policy)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EU의 환경관련 행동 전략은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금지 규제(RoHS 지침) 및 회수, 재사용, 재활용 비율 준수(WEEE 지침), 화학물질 등록, 관리 의무화 정책인 REACH를 비롯해 에너지사용 제품에 대해 친환경설계(에코디자인, eco-design) 의무화 규제(EuP 지침) 등으로 그 영역이

확대·구체화되고 있으며, 나아가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등에서도 동일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림] 환경규제 현황 및 진행상황

[표]는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예정인 EU의 전기전자제품 관련 환경규제로 관련 업계에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식하여 대응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WEEE 지침은 소비자에 의해 사용된 후 소각, 매립되지 않은 전기전자 장비들을 생산자로 하여금 일정한 비율로 회수하고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한 지침으로 이 비율을 준수하는 기업의 해당 제품만이 EU 내에서 판매가 가능하며 제조업체가 무료 수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체는 소비자에게 WEEE 분리수거 체계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2005년 8월 13일 이후에 출시되는 제품의 경우 상기 지침이 적용되는 대상 제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RoHS 지침은 폐전기전자제품의 처분과 재활용 과정에서 재활용성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제품 내 사용을 제한하고, 이러한 물질들을 유해성이 적은 물질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한 지침으로 2006년 7월부터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및 PBDE가 포함된 제품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지침 외에도 최근 부각되고 있는 EuP 지침은 필수요건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 설계시 제품의 전과정을 고려하여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에코디자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이행방안 준수, 적합성 평가 및 선언(CE 마크 부착), 환경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규는 향후 해당 제품별 세부 이행방안이 구체화되고 회원국별 세부 이행법률이 제정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REACH는 약 40여개 화학물질 관리법령을 통합한 단일 통합관리체제로 EU 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각 회원국 정부기관에서 생산자가 일정규모 이상 생산, 사용하는 물질을 등록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새로운 EU의 통합 화학물질 관리정책이다. 세

부 내용은 생산량 1톤 이상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위험물질 또는 100톤 이상 생산물질에 대한 검증 평가, 대상물질의 특정사용 용도에 대한 허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기전자 분야의 경우 의도적 배출범위 등과 같은 부분에서 적용범위가 불분명하여 해당 업계는 지속적인 동향 파악 및 대응방안 수립이 요구된다.

[표1] 주요 환경규제 현황 및 주요내용

환경규제	시행일	주요내용	핵심 포인트
WEEE지침	05.8	회수, 재사용 및 재활용 비율 준수 의무화	- 재활용률/재생률 준수 대형가전(75/80%), 소형가(50/70%), IT(65/75%)
RoHS지침	06.7	전기전자제품 내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 사용제한	- 물질별 최대 허용치 준수 *납, 수은, 6가크롬, PBB, PBDE : 1000ppm *카드뮴 : 100ppm
에코디자인 지침 (EUP지침)	08.9	에너지사용제품 설계 시 에코디자인(친환경적 디자인) 채택	- 이행방안의 설계 요구사항 만족 - 자기적합성 평가/선언(CE마크) - 제품 환경성 정보 제공
REACH	07.6	1톤/년 이상 제조수입 화학물질 유독량, 유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허가 의무화	- 미확인 화학물질 함유제품 수입 규제 - 제조 및 수입업자의 화학물질 정보 - 제공의무 및 등록시한 설정 - 발암성, 잔류성 등 위험물질, 100톤/년 이상 유독물질 특별 관리

주요 기업 대응현황 및 방향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EU를 중심으로 한 환경규제가 확대·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 예방 및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전자업계에서는 제품 환경관리 측면에 많은 노력과 투자를 활발히 기울이고 있다. 국내외에서 이런 일련의 활동들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히 움직여 왔으며, 특히 대부분의 기업들이 제품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핵심 요소인 협력업체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증제 운영, 관련 기술지원 및 유해물질 관리기법 전수 등의 상생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표2]는 국내외 전자업체들의 규제대응 수준을 비교한 것으로 유해물질 규제대응 차원에서 LG전자, 삼성전자 등과 같은 국내 기업은 일본, 미국, EU 선진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자체 관리 기준, 분석 시스템, 협력사 관리 등에서 동등 대응 수준을 확보하고 있으나, WEEE 지침 대응을 위한 폐제품 처리 측면에서는 자체 회수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선진기업들과 달리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 대부분 규제 국가 내 회수처리 컨소시엄에 가입해 의무적 회수처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편, Eup 지침 대응에 있어서도 유럽, 일본 등의 선진기업들은 일찍이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해 자사 환경수준을 분석하여 개선 항목을 도출하고 그에 상응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매년 성과를 관리하여 대외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활동과 관련해 국내 기업들은 아직까지 규제대응 차원에서 수동적으로 접근하는 수준으로 제품별 에코디자인 요구사항 파악과 체계 및 추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2] 국내외 기업의 규제대응 수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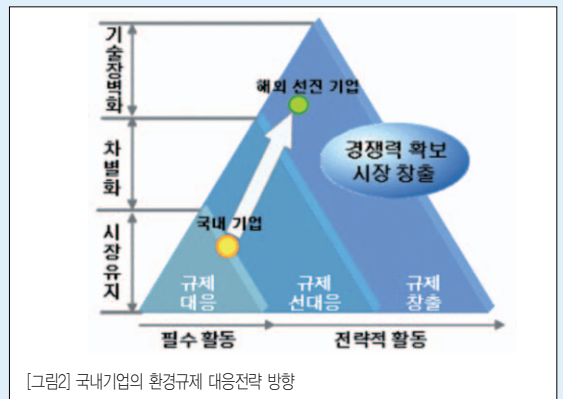
구분	국내 기업	국외 기업
유해물질 관리	- 자체 관리기준 및 검증 체계 수립	- 자체 관리기준 및 검증 체계 수립
협력사 관리	- 협력사 친환경 인증제 운영	- 협력사 친환경 인증제 운영
폐제품 처리	- 의무적 회수처리(일부 자발적)	- 자발적 회수처리 시스템 운영
에코디자인	- 개념 정립 및 체계 구축 中	- 친환경 목표 수립, 성과 관리
대응수준	- 규제대응 및 시장 유지	- 규제 선대응 및 제품 차별화

시사점 및 향후 기업의 자세

지금까지 전기전자제품과 관련해 선진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환경규제 동향과 이에 대응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들의 전략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사회의 환경 인식이 높아지고 새로운 규제 대상이 확대·강화되고 있는 여건 속에서 기업이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업환경 대응전략이 환경규제를 회피하는 수단, 즉 수동적인 대응 수준에 그쳐서는 시장을 선도, 선점할 수 없음을 자명하다.

따라서, 국내기업들은 [그림2]에 나타난 것과 같이 환경규제 대응전략 방향을 규제대응 중심의 수동적인 자세에서 탈피하고 기업이 스스로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동적인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 즉, 환경문제를 기업전략 차원에서 접근하여 이를 기술 장벽화, 제품 차별화 함으로써 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림2] 국내기업의 환경규제 대응전략 방향

➔ 화학물질관련 국제 규제 동향



(주)세이프케미칼 | 정옥선 대표이사

1992년 리오에서 열린 세계환경회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기본 취지 하에 '의제 21(Agenda 21)'을 발표했다. 이 중 Chapter 19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행동강령을 각국에 요구하고 있으며, 결국 국제적으로 환경규제의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경제적 열세에 있거나 인적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 부담이 되고 있다.

선진국은 자국의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수입 화학제품과 공산품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를 수입규제 수단 및 자국의 산업보호수단으로 활용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국제협약, UN 등 국제기구, EU 등 지역경제기구, 선진국, 중국 등에서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급변하고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음에 가장 최근에 변하고 있는 국제적 규제를 정리한다.

UN차원의 제도

화학물질 국제조화시스템(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의 도입으로 국제적으로 화학물질의 분류와 표시가 통일된다. 대부분의 국가는 제도 도입을 2008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일본은 2006년 12월부터 노동안전위생법에 의해 이를 법적 제도로 도입했다. 일본은 화학물질을 수출할 경우 MSDS와 경고표지가 GHS를 따라야 한다.

EU



REACH

오랜 시간에 걸쳐 법제화가 진행되던 EU 신 화학물질관리제도(REACH)가 마침내 작년 12월 30일 법제화됨으로써 2007

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REACH 제도는 EU의 기존화학물질(EINECS 등재물질)에 대해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공산품(일정 범위 내)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생산/수입량이나 위해성 정도에 따라 등록(registration), 평가(evaluation), 허가(authorization)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시험 비용과 행정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의 경우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이 대상이다.

우리나라가 2002년도 통계상 화학제품을 EU 회원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금액은 10.3억불(고분자 포함)로 화학제품 전체 수출액 147.3억불의 약 7%로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동구권에 속해 있던 헝가리, 폴란드 등 10개 국가가 EU에 포함됨으로써 앞으로 그 현재 비중보다 더욱 높아질 것이다.

RoHS

2002년 제정된 EU의 전기전자제품 내 특정유해물질 규제 지침(RoHS)은 2006년 7월 1일부터 EU 역내에서 유통되는 전기전자제품에서 중금속인 수은, 납, 카드뮴, 6가크롬과 브롬계 난연제인 PBB(폴리브롬화비페닐, polybrominated biphenyl)과 PBDE(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함량 기준은 수은, 납, 6가크롬, PBB, PBDE : 0.1%, 카드뮴 : 0.01%)

식품 접촉 물질(food contact material) 규제

유럽의 식품 용기·포장에 사용되는 고분자 수지의 원료 물질, 첨가물 목록(2002/72/EC)이 2006년 12월 31일 마감되었다. 앞으로는 새로 발표될 제도에 따라야 한다. 유럽으로 식품 용기포장 원료 물질을 수출하거나 식품 수출시 해당 용기에 대해 그 사용을 허용하는 물질목록(positive list)을 반드시 확인하여 법적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DEHP 등 프탈레이트 규제

2007년 1월 16일부터 어린이(14세 이하) 용품에 DEHP(DOP), DBP, BBP의 사용이 엄격히 규제된다 (2005/84/EC). 장난감과 어린이 용품에 해당 물질 함량이 0.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DINP, DIDP, DNOP는 3세 이하 어린이가 입에 넣을 수 있는 제품 내 함량 0.1%를 초과

하지 않아야 한다.

2006년 4월 13일 EU 집행위원회는 DINP와 DIDP가 위해성 평가 결과 안전하다는 발표를 했고, 따라서 위의 법규 일부의 개정 여지가 있다. 해당 정보는 <http://www.dinp-facts.com/RA>와 <http://www.didp-facts.com/RA>에서 볼 수 있다.

PFOS 규제

2005년 12월 5일 발수제로 사용되는 PFOS(perfluorooctane sulfonate)의 규제 계획을 발표했다(2005/0244(COD)). 해당 물질을 0.1% 이상 함유한 제품의 시장 출시를 금지하는 법규(안)으로서, 아직 최종 결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일본

화학물질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종 감시물질로 지정된 UV 흡수제인 2-(2H-Benzotriazole-2-yl)-4, 6-bis(1,1-dimethylethyl)phenol이 2006년 4월부터 플라스틱 성형제품 중 건축재료, 자동차 부품, 전자부품, 잡화, 필름 등에 사용될 수 없다. 일본으로 수출되는 해당 제품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RoHS

2006년 7월부터 개인용 컴퓨터, 조립식 에어컨, TV,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전자레인지, 의류건조기 등 7개 품목에 대해 6대 유해물질 함유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함유정보기준'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자원유효이용촉진법의 '함유정보기준' 표기는 2005년 12월 20일 제정된 '전기전자제품의 특정 화학물질 함유표시방법(JIS C 0950)'을 따른다. 함량기준은 EU의 RoHS 지침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J-Moss 함유마크(R마크·오렌지색)의 표시와 웹상에 함유정보 표시를 한다. 기준치 이하인 경우에는 임의로 J-Moss 비함유마크(그린마크)로 표시할 수 있다.

식품 중 잔류농약 기준 강화

노동후생성에 의해 식품 중 잔류허용농도 강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중국

RoHS

중국판 RoHS인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은 EU

RoHS와 유사하며, 시행일은 2007년 3월 1일로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유해물질 제한 대상 제품 목록 등 세부 규정이 완전히 발표되지는 않았다. 현재로서는 EU RoHS와 같은 6개 유해물질에 한정되어 있으나, 추가될 수 있다. 관리대상 제품은 전자정보제품으로서 '목록'에 등재된 전자제품이다. 주요내용은 대상제품에 대한 특정 유해물질 제한, 사전인증(CCC 인증), 라벨링이다. 1차적으로 오는 3월부터 유해물질의 명칭과 함량, 환경을 고려한 사용기간, 재활용 여부를 표기하는 라벨링 및 정보공개 의무가 적용된다. 또한 포장지에도 라벨링을 해야 한다. 전자부품과 전자소재, 2007년 3월 이후에 생산된 A/S 부품과 완성조립품도 대상이다. 납, 수은 등 특정 유해물질 사용이 금지되는 대상 제품 및 그 시행시기는 추후 발표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식품 용기·포장재 규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허용물질 목록(positive list)인 GB 9685-2003의 개정 초안이 작년 12월 26일 발표되었고, 현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중이다. 올해 3월 정도에 개정작업이 완료될 전망이다. 담당부서는 중국질병센터(CDC)이며, 추가분은 적어도 2개국의 허용물질 목록에 있는 물질이다. 개정된 목록이 발표되면, 이 목록에 없는 물질은 식품용기·포장에 사용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moh.gov.cn/newshtml/17132.htm>을 참고하기 바란다.

신규화학물질 규제

중국 환경보호총국(SEPA)은 'Provisions on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of New Chemical Substances'에 따라 2004년 9월부터 중국 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SEPA는 해당 법규를 상반기에 여러 부분에 걸쳐 개정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국 정책동향

- 대기오염통합전략 (IES 2006) 국제워크숍을 다녀와서 -

국립환경과학원 | 홍지형 대기총량과장



2006년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나흘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및 일본의 대기환경국

이 공동으로 주관한 'International Workshop on Climate Change Actions and Co-Benefit Opportunities'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2004년 한국 환경부와 미국 환경청간에 체결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통합환경전략 연구프로그램 (IES, Integrated Environmental Strategy Research Program) 추진합의(MOU)에 따라 미국에서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멕시코, 칠레, 인도 등 7개국 30여명이 회의에 참가하여 각국의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통합전략 추진사례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각국 정책동향을 발표하고 토론했다.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환경문제는 국제사회의 커다란 쟁점과 이슈가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브라질 리우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1997년 교토 의정서 채택 이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인 온실가스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온실가스는 화석연료의 사용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대기오염물질과 함께 배출되게 된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연계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전략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의 주된 주제도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을 함께 저감할 수 있는 통합전략을 토의하고 논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것은 자국민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며 부수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한정된 국가예산을 고려할 때 매우 효율적인 접근방법이 될 수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초강연 및 사례발표와 일본, 중국, 멕시코, 칠레 등 각 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 사례를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열린 토론을 벌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 대기정책과의 김승희 서기관(현 지구환경담당관)과 국립환경과학원 필자 등 담당공무원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및 환경관리공단의 민간분야 연구책임자들이 참석하여 온실가스 감축전략, 수도권 특별대책에 따른 통합환경 전략연구, 온실가스 배출계수 및 인벤토리 개발현황과 대기정책지원시스템

의 운영 등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인상 깊었던 각 나라의 사례 중에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과 중국, 멕시코, 칠레 등 개도국의 온실가스 저감정책 동향을 일부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미국 연방환경청의 통합환경전략 추진 책임자와 주정부의 담당공무원들이 연사로 나와 연방정부의 정책사례와 주정부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발표했다. 연방정부는 산업, 자동차, 도시개발 등에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교토 의정서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정부 및 시 단위에서는 독자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이색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뉴욕 등 동북부 10개 주, 캘리포니아 등 태평양 연안 3개주는 연방정부와는 별개로 독자적인 감축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정부차원의 감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내 시애틀 등 44개 주, 288개 시는 별도 합의를 통해 교토 의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로 하는 등 연방정부의 정책목표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향후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소송이 2건 진행 중에 있으며 첫째, 온실가스(이산화탄소)가 대기오염물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메사추세츠 주와 기업간의 소송이 그것이며 금년 초 대법원에서 판결이 예상되고 있다. 둘째, 독자적인 환경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2008년부터 도입하고자 하는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법령에 대해 자동차회사가 이산화탄소 규제는 연방정부(교통성)의 소관업무 사항이라고 하는 권한쟁의 소송을 지방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05년 카트리나 재해, 2006년 미중부지역 대규모 화재 등의 일부 원인을 온실가스 배출영향으로 보고 있는 미 상원에서 연방정부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요구하는 법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부시 정부의 온실가스 정책방향은 변화의 가능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필자가 미국에 체류할 당시 (2006년 8월 30일) 캘리포니아 주지사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 지구온난화 전쟁이라는 표현으로 온실가스 관련 법안 입법계획을 언론에 보도했는데, 그 발표내용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오늘 우리가 지구온난화 전쟁에 대한 입법부의 역사적 협약(AB 32: 캘리포니아 대기법령 제 32호)을 맺게 됨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캘리포니아는 이제

시장거리에 바탕을 둔 온실가스 감축시스템을 개발하여 세계적인 리더로 나아가 하며, AB 32는 우리 경제를 강화하고 환경을 개선하며 장래 캘리포니아를 환경리더로 자리 잡게 할 것입니다.”

일본은 교토 협약을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이는 계기로 삼기 위해 어느 선진국보다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이다. 환경 시범도시 협력 프로그램, 지구환경전략 연구소 중국지부 설치 등 중국 내의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97년 이후 귀양, 대련, 충칭 등 3개 환경 시범도시 협력 프로그램에 307억 엔을 지원하여 노후화된 철강, 시멘트, 발전시설의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국, 멕시코, 칠레 등 개도국은 현재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오염개선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황산화물 등 12개 오염물질에 대한 총량규제, 에너지 집약도 20% 개선, 에너지세 도입 등을 포함한 제11차 국가 5개년 계획(2006~2010)을 마련해 추진중에 있으며 CDM사업 등을 유치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계획하고 있다. 멕시코는 멕시코시티의 대기오염 특히 오존 오염개선을 위해 2010년까지 12만대의 노후택시 중 8만대를 교체하고 1,000대의 하이브리드 버스를 보급하며 직행간선 버스노선 설치 및 전철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칠레는 산티아고시의 대기오염개선을 위하여 CNG버스 및 하이브리드 버스 보급, 교통체계 개선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필자 등 국내 참석자들은 회의기간 중 시애틀 시의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의 추진 현장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으며, 시애틀 시에서 파견 나온 대기담당 공무원의 안내로 시애틀 항구와 시청 및 시내에서 운행중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견학했다. 시애틀 시는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스타벅스 커피, 보잉사 등으로 유명한 미국의 대표적인 친환경 도시이다. 특히, 바다에 접한 입지관계로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 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미국 내 도시 중 온실가스 문제 대응에 가장 선도적인 도시 중의 하나이다. 시애틀 항구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로, 항구 내에 움직이는 대형차량과 선박에서 사용하는 디젤 연료에 의한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이 심각한 지역이었다. 이에 따라 시애틀 시에서는 시 소유 디젤 차량에 대해 오염물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하이브리드차량과 바이오디젤 연료를 보급하였으며 항구에 드나드는 선박에 대해서도 저황유 사용을 의무화하고, 선박이 부두 내에 정박하고 있을 때 외부전력을 공급하여 공회전을 금지(Plug-in program : 디젤엔진의 냉각수와 엔진오일을 전기를 이용하여 일정온도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공회전을 방지하는 프로그램)하며, 운항 중에는 반드시 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두 내에서 가동 중인 부두크레인의 동력을 디젤에서 전기로 100% 전환하였으며, 시내에서 운행하는 트럭에 대

하여 Truck-stop Electrification program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선박에 적용하는 Plug-in program과 동일한 개념이다. 시애틀 시청은 시애틀 시의 중심가에 새로이 친환경 개념으로 건설된 아름다운 건물이다. 2003년 완공된 친환경 건물로, 7,200만 달러가 소요되었으며, 기존 유사한 크기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양의 30%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구조로 건설되었다고 한다. 미국은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효율이 대폭 향상된 친환경 빌딩(Green Building Program) 도입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애틀에는 현재까지 약 40개의 건물이 이러한 정책에 따라 완공되었다. 친환경 빌딩은 에너지 환경 등급 (LEED,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에 따라 플래티늄, 골드, 실버, 인증 등 4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시애틀 시청은 실버 등급에 해당되는 건물이다.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시애틀 시청은 몇 가지 특징적인 신기술을 도입하고 있었는데, 이를 간단히 소개하면 먼저, 시청의 외관은 외부의 빛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개폐식 구조로 되어있으며, 건물 옥상은 정원으로 만들어져 자연적으로 열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사무실 공간을 찾았을 때 매우 흥미로운 냉방시스템을 보았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건물은 고정식 냉방시스템으로 설계하여 냉방이 나오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나, 시애틀 시청의 사무실에는 냉방위치를 근무자의 동선에 맞추어 적절히 바꿀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사용효율을 높이고 있다. 시애틀은 연중 강수량이 많은 도시로, 시청은 이러한 빗물을 지하 대형저장고에 모아 화장실 용수 및 청소 등에 사용함으로써 연간 물 사용량의 30% 이상을 절감하고 있었다.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 사례를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에서 계획하고 추진 중인 정책 사례들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특히 시애틀을 방문하고 있는 동안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온실가스 규제법령 입법 보도는 신선한 충격이었으며, 참석하고 있는 미국 연방공무원조차도 주정부의 발 빠른 대책추진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의 표현을 감추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아직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이 아니기 때문에 온실가스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에너지사용량 등을 고려하면 가까운 장래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정해질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상황이 될 경우 국내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환경적인 문제 이전에 생존의 문제로 부각될 것이며 감축 의무가 현실화 되었을 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으므로, 각 계의 중지를 모아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는 온실가스 저감전략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르웨이,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엄격 규제**

노르웨이 오염관리청(SFT, State Pollution Control Authority)이 소비자제품에 사용되는 10종의 화학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기존 규제대상 11종에 대해 좀더 규제수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제안된 법안에 따라 일부 제품의 경우는 EU 및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에서 허용되는 경우라도 노르웨이 역내에서는 해충물질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새롭게 그 사용이 금지되는 화학물질은 MCCPs, biphenyl A, musk xylene 및 musk ketone, triclosan, PFOS and PFOA, 브롬계 난연제 deca-BDE, HBCDD, TBBPA 포함 10종이다. 그리고, 프탈레이트 DEHP, 유기주석화합물 TBT 및 TFT, pentachlorophenyl, the tensides DTDMAC, DODMAC/DSDMAC 및 DHTDMAC, 중금속인 납, 카드뮴, 수은, 비소 및 이들의 화합물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기준치가 적용된다.

※ 유럽경제지역(EEA) : 유럽의 양대 무역블록인 EU와 노르웨이 등 EU 비가맹국 중심의 유럽자

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이 시장단일화에 합의해 1993년 1월 출범한 경제블록

출처 | 노르웨이 SFT

**영국, 민간대상 기후변화
대응 촉진 노력**



영국정부는 지난 12월 28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환경파괴를 멈추고, 좀더 친환경적인 생활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온라인 정보시스템(Directgov, <http://www.direct.gov.uk/EnvironmentAndGreenerLiving/fs/en>)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친환경적인 생활패턴을 위한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될 이 온라인 정보시스템은 가정과 사무실, 학교, 쇼핑, 여행 등 일상생활에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방지를 위해 일반국민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또한 개인 활동에 따른 탄소배출량도 전체 배출량의 40%에 해당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Directgov는 개인에게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행동지침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영국 Defra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에서도
RoHS 규제 적용**

2007년 새해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새롭게 EU에 가입했다. 이 두나라의 가입으로 EU는 총 27개국, 인구 5억 명 규모의 단일시장을 형성하게 됐다.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이제 EU 가입으로 EU의 대표적인 제품환경규제인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제한지침(RoHS) 등의 적용을 받게 된다. EU 역내에 대상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두나라의 제조사들은 이미 해당 규제의 영향권 아래 있었으나, EU 가입으로 자국 내 판매제품에 대해서도 RoHS 대응이 필요하게 됐다.

출처 | evertiq.com

<8면>에 이어서

KECE는 회원사 및 EU의 펀딩만으로 그 활동을 전개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설립 이후, EU기관 및 관련 유럽기업단체들과 일주일에 최소 10~15개 이상의 미팅 및 회의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관련 활동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유럽소재의 한국 유럽전문가분들의 지원과 한국 전문그룹 및 전문가분들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7년에는 국내 기업협의체와의 협력 및 회원사와의 공조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REACH에 대해 불명확한 점이 있으시면, 유럽집행위원회의 Bjorn Hansen, David Grant, Wolfgang Hehn, RoHS에 대해서는 Anna Passera, EuP에 관해서는 Andras Toth, Martin Eifel 과 직접 KECE에서 관련사항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법안 및 정책에 대한 유럽의회의 동향이 궁금하시다면, KECE에서 유럽의회 관련 위원회의 논의를 모니터링해 보내

드리겠습니다(KECE는 유럽의회에 전문 로비 그룹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각 유럽선두기업들의 대응책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분석을 하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기업협의체와 많은 부분을 함께 공조할 계획입니다. 선진국들의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사가 대응책 준비가 끝난 경우(대체물질 및 대체기술개발)는 자사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는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이 동일한 상태에서 이러한 시차가 발생한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질문을 해봐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기간 동안 그리고 다가오는 2007년 한국기업은 어느 상황에 있었고 있게 될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2008년에는 한 보 더 나아가 경쟁력 확보전략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공 지 사 항

- ⇒ 「해외환경규제동향」에서는 '전문가 리포트' 코너에 게재할 원고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 본지의 공급한 사항이나 해외 신규제에 대한 제보가 있으신 분은 아래 「친환경상품진흥원」내 TEN사무국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TEN 온라인정보시스템(www.ten-info.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회의 정보

- ① 1.11. ~ 1.12. 캘리포니아 대기 환경규제 설명회 (미국 캘리포니아 베버리힐즈)
- ② 1.17. ~ 1.19. 국제 전기전자 재활용 회의(International Electronics Recycling Congress) (독일 함부르크)
- ③ 1.24. ~ 1.25. Clean Energy Power® 2007 (독일 베를린)
- ④ 1.29. ~ 1.31. 2007년 유럽 재생가능 에너지정책 컨퍼런스 (벨기에 브뤼셀)
- ⑤ 1.30. Preparing for Effective Emissions Trading under EU ETS Phase II and Phase III (영국 런던)
- ⑥ 2.5. ~ 2.9. 제24차 UNEP 집행이사회 및 세계환경장관 포럼 (케냐 나이로비)
- ⑦ 2.7. RoHS 규제 대응 실무교육(Practical RoHS Compliance Training) (영국 레더헤드)

2007년 0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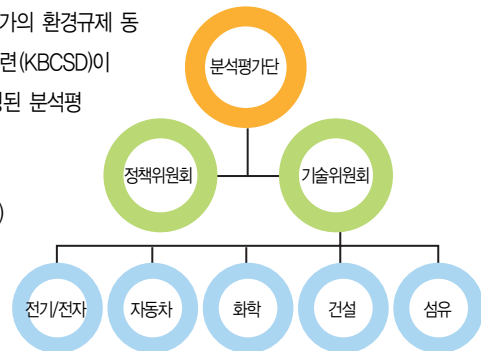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①	12	13
14	15	16	17	18 ②	19	20
21	22	23	24	25 ③	26	27
28	29 ④	30 ⑤	31			

2006년 0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⑥	6	7 ⑦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EN시스템운영체제

-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TEN)」는 우리나라 주요 교역대상국가의 환경규제 동향을 조기 수집하여 기업체에 전파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전경련(KBCSD)이 구축한 정보네트워크로 50여명의 각 산업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석평가단을 통해 대응방안 및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TEN)」의 해외(유럽, 미국, 중국, 일본) 정보 수집, 분석, 평가 및 네트워크 운영은 친환경상품진흥원, KOTRA,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발행처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사무국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613-2 친환경상품진흥원,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사무국
 전 화 : 02-358-6800(#231) | 팩 스 : 02-358-8560 | 이메일 : jung60@koeco.or.kr

